

##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sup>1)</sup>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박정훈

AI 기술의 발전과 챗GPT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팽배하다.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 믿었다. 정부는 기술 혁신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교육대책을 발표한다.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춰 코딩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술발전과 무관하게 고용과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게 가장 유력한 대안처럼 보인다. 성적 향상은 언제나 중요한 교육의 목표다. 그러나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 발전 때문만이 아니다.

### 산업구조의 변화

자본주의 황금기 산업의 주력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계와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양질의 물건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노동생산성을 높였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물건의 개별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충분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구입할 수 있었다. 물건이 판매가 잘되면 이윤을 얻은 기업이 다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 소비여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소수의 실업자들은 국가의 잔여적 복지를 통해 해결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1950~60년대, 일본에서는 1970년~80년대,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에 매우 짧은 시기 동안 일어난 호황이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중장년층은 과거를 그리워한다.

제조업은 여러 나라에 추억을 남기며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고 제조업이 떠난 자리에는 일자리 문제가 남았다. 인류에게 필요한 상품 생산은 충분해 보였고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할 때가 왔다.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등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놓였다.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자본은 제조업 투자 대신 돈이 돈을 낳는 금융업으로 옮겨갔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적 지대수익을 올리는데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도시의 실업자들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안타깝게도 서비스일자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한사람의 알바노동자를 아무리 쥐어짜보았자 1시간에 1000명의 손님을 응대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키오스크가 생산성이 높은 기계도 아니다. 키오스크를 다루는 소비자가 기계를 매일 다루는 숙련노동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의 변덕스러운 동선과 마음을 자영업자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들기도 어렵다.

### 서비스산업은 실업자의 노동.

서비스 산업 분야가 인간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방법도 마땅히 없다면,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노동력을 잘게 쪼개서 필요할 때만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명

1) ‘AI가 저임금노동자를 대체할거라는 착각’\_박정훈\_학교 도서관 저널 05 (통권 133호) 2023년 5월호 수정 보완한 원고입니다.

목으로 쫓겨나가거나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 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영업으로 몰리게 됐다. 이들 대부분은 음식점, 편의점, 카페 사장님이 됐다. 즉 서비스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동네 사장님 역시 정규직 일자리에 쫓겨난 이들, 자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규모가 경제활동인구 2500만 명중, 500만 명 정도 된다.

사장 아닌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은 사장님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주휴수당을 떼이거나 연차, 퇴직금을 포기하게 된다. 똑똑한 알바노동자가 노동법으로 반격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사장님들은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맞선다. 알바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동법에 대한 지식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점주에게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징수하여 지대적 수익을 챙기면서 개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이즈 뿐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점주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일하는 가게 간판에 적힌 본사를 신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쟁 속에서 한 발 빠져 순수한 지대적 수익을 걷어가는 이가 있으니 바로 건물주다. 개별가게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만 존재한다면 건물주는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생산한 사회적 부를 누가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가라는 권력의 문제다.

#### 극단적으로 유연화된 노동. 플랫폼 노동.

노동자를 최저가로 필요한 시간에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장님의 욕망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항상적일 수 없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을 때는 노동력 공급도 줄이고 싶은 법이다. 실제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봄과 여름에 수요가 많은 에어컨 공장에서는 봄과 여름에만 노동자를 연장 야근 휴일 근로시키고, 수요가 적은 겨울에는 해고를 시키고 싶은 법이다. 이를 경영학에서는 수량적 유연화라고 불렀고, 우리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서비스 산업에서는 주 단위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고 싶은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에는 알바노동자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고, 손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에는 알바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4.5시간으로 줄여 주휴수당 조차 주지 않으면 된다. 해고와 채용 없이도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며 제시한 주 69시간 노동 논란은 수량적유연화에 대한 자본의 순수한 욕망의 표현이자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이미 노동시간은 극단적으로 유연화 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은 하루 동안 두 세 번 출근하고 두 세 번 퇴근하면서 각기 다른 유니폼을 갈아입는다. 노동시간이 유연화 되면 일자리가 많을 필요도 없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만 많으면 된다. 바쁠 때는 추가적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오래 일 시키거나 그 때 그 때 필요한 인력을 잠깐 사용할 수 있다. 일이 한가해지면 임시노동자들을 내보내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이다.

이 꿈같은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회사는 더 이상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다. 핸드폰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일감이 올 때 까지 기다리게 했다. 일감을 던져주고 먼저 잡는 노동자들에게 월급, 주급, 시급이 아니라 건당 임금을 지급한다. 일감이 많으면 건당 수수료를 주고 대기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를 사용하면 되고, 일감이 없으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산도구를 일

하는 사람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일감이 없을 때 비용부담을 사장이 지게 되므로 이들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안 된다.

배달노동자들은 이제 음식가게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앱에 접속해서 핸드폰 위에 일감이 던져지기를 기다린다. 400만 원에 육박하는 오토바이와 500만 원 정도의 영업용 보험료를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름값, 수리비,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일감이 없을 때의 생계까지 모든 위험을 노동자가 져야 한다. 사장님은 배달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져야 할 모든 위험에서 해방된다. 심지어 구조조정의 비용도 사라진다. 과잉생산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축소해야 할 때, 전통적 자본가들은 희망퇴직을 받고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투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플랫폼 자본가들은 생산설비를 소유하지 않는다. 생산도구는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고, 노동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근로기준법 바깥 노동자다. 플랫폼은 실시간 알고리즘 배달료를 통해 내일부터 배달료를 최저로 깎아 버리면 되고 이를 견딜 수 있는 노동자들은 플랫폼세계의 시민으로 남고, 견딜 수 없는 노동자들은 플랫폼에서 탈출하면서 오토바이를 뚱값에 팔아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플랫폼산업에서 생산수단은 데이터에 대한 축출과 집적이고 플랫폼기업은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작업도구에 대해서는 소유하지 않고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로 바꿔 관리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현실의 택시는 카카오앱속의 데이터로 치환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관리된다. 자본의 소유와 이윤 창출의 작동원리가 변하고 있다.

###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AI와 기술의 발달로, 배달과 같은 저숙련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커다란 착각이다. 로봇과 AI가 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일이 인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인간로봇은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인간 노동자야말로 최고의 로봇이기 때문이다. AI가 대체하기 쉬운 일은 오히려 데이터를 확보하여 알고리즘을 만들기 편한 관리직이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처럼 AI로 배차와 배달료를 결정하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존재는 배달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었다. 디자인, 편집, 번역은 물론 주식투자까지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 오히려 AI의 지시를 받거나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2019년과 2022년 사이 대한민국 취업자수는 96만 6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51만1000명이 단순노무종사자다.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이 음식배달, 택배, 가사, 경비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이거나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술을 쫓아 교육을 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꿈이다. 어제 프로그램을 짰 인간의 노동은, 오늘 데이터화되고 축적되어 내일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소수의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간사이의 경쟁을 강화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가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근면성실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는 위협에 빠진다. 각자가 생계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며 사회안정망을 통해 사회적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술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소외된 이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감시하는 일이다. 이는 시민적 윤리다. 일자리의 문제가 일의 배분, 시간의 배분, 부의 배분, 기술의 배분이라는 정치사회적 문제라는 걸 공유하지 않는다면 노동력이 아니라 주권자를 만들

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많은 데이터를 독점하고 우리 삶을 지배할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들이다. 경제권력을 제어할 시민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코딩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과 사회를 읽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됐다. 우리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와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한계 2)

“더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7월21일 인도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계에 자랑한 내용이다. 이 장관의 연설이 있는 지 3일 뒤 웹툰작가,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는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고용, 산재보험이 ‘국가 주도의 보험사기’로 전락할 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관 말대로 고용보험 납부자가 늘어나긴 했다. 과거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던 보험설계사, 택배, 커서비스 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배달노동자들도 2022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배달업체 사장들은 이를 핑계로 각종 수수료를 높이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장기 실업을 전제한 현행 고용보험은 의미가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소득이 줄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4~5개월간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하루 2만6600원이 하한액이라 이 돈을 받고 마음 편히 취업준비를 할 사람은 없다. 산재보험 역시 내는 보험료는 높이고 받는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해버렸다. 라이더유니온의 항의에 노동부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의 대책은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장관은 전 세계 장관들과 자국 노동자를 기망한 셈이다.

배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없애달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선택에 맡겨버리면 제도에 대한 지식과 보험료를 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만이 실업, 사고, 질병, 장애, 은퇴 후의 삶을 보호받는다.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홈페이지에는 사회보험을 의무화하는 이유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공동체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와 연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시럽급여’ 논란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각자도생이라는 지옥의 문을 달콤한 말로 열어젖힌 최악의 행위였다. 산업구조 변화와 임시직 노동자의 반복적 실업에 기존 고용보험이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국가가 개별 국민 책임으로 돌린 셈이다. 이제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사회보험

2) 국가의 보험사기\_경향신문\_박정훈\_230801, 기후 사회보험이 필요하다\_한국일보\_박정훈 230808 수정 보완

은커녕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상실한 채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기존 사회보험의 한계와 오류는 기존 시스템을 옹호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구조 변화와 복합위기에 맞춘 사회보험 체계가 필요하다.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보험 제도를 설계하거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게 부분 실업을 인정해 소득을 보충해주는 방식을 상상해볼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걸 맞는 사회보험역시 상상해보아야 한다.

인도에서는 폭염이 3일 이상 계속되어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보상해 주는 ‘폭염 수입 보험’이 나왔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주는 ‘파라메트릭’형 민간 보험이다. 그러나 기후 재앙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고, 취약한 국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므로 상호 호혜와 연대 정신에 입각한 사회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를 기후 실업급여로 명명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여러 직업을 가지는 것을 넘어 여러 일감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가족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통적 사회보험제도는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사업장과 취업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보편적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을 완전히 대체 할 수 없고, 극복해야 할 한계들이 존재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형태가 유연화 되고 사용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찾기는 어렵지 않다.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징수 역시 사용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발전된 기술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가능하게 하고 징수 역시 편리하다.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기업들이 배달 한 건당 사회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징수하고 있다. 각각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자본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사회적으로 떠넘기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산업현장에서의 협상력 재고 없는 기본소득은 노동조건의 후퇴 명분이 될 수 있다. 자본이 생산도구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포기하고 노동법에서 해방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무한한 축적이 가능해졌다. 자본은 더 이상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에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대책인력이 가득하다. 특히 온라인기반 플랫폼은 전세계 노동자들을 번역, 디자인, 교정교열 등의 일감 찾기 경쟁 속에 몰아넣는다. 자본에 대한 규제와 구체적인 생산현장에 대한 증언과 변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상력과 투쟁력이 필수적이다.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총자본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제기되지 않고, 노동운동 몰락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자본의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자본은 얼마든지 사회적 압력을 건당 임금 삭감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총자본에 대한 규제와 함께 구체적인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셋째, 기본소득 운동 없이 주어지는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경험’과 연대의식의 강화

보다는 소비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사회보험제도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저항 속에서 나온 사회적 타협이었다. 현재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 주체의 형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주체를 호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주체들이 조직되어 새로운 대안과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이 모든 지적들과 한계는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이 가지는 한계이며, 이는 기본소득이 아닌 모든 정책적 대안이 가지는 한계와 다르지 않다. 고용보험 역시 총자본의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고용보험을 없애는 것을 대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보다는 기본소득이라는 깃발을 이용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복지경험'이 적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에 기본소득 운동이 결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짜 기본소득 가짜 기본소득 논쟁보다 중요한 건 기본소득 운동이 보편적 현금성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복지경험들이 쌓여 보편적 증세와 사회안정망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조직적 지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기본소득 정치세력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